

# 핵무장 전·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비교

남 만 권\*

## 목 차

- I. 서론
- II.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개념과 특징
- III. 핵무장 이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 IV. 핵무장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 V. 한국 안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 VI. 결 론

## I. 서론

북핵시설 블능화 과정의 지지부진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향후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등 북핵문제가 악화될 경우 북한이 선택할 옵션에는 '핵무장'도 포함될 수 있다. 현재 수량 미상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실전용 핵무장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 것은 오산(誤算)일 수 있다. 북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양

\*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국은 적절한 억제력을 구비하지 않는 한 연합작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인데, 이는 핵무장 이후 단계에서 표출될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핵무장 이전 단계에 비해 획기적인 차이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전쟁관과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는데, 그 속성은 본질적으로 공세적인 것으로써 기계화 부대의 기동 능력, 미사일·항공기를 이용한 선제공격능력, 장거리 야포에 의한 수도권 파괴능력, 전선 후방 교란 위주의 특수전 능력 등에 크게 의존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기존 군사전략의 공세적 유용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핵무기가 군사적으로 막강한 위력을 발하는 절대무기인 점을 감안할 때, 핵무장시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은 재래식 군사력 위주의 군사전략과 비교하여 본질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핵무장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의 각각에 대한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을 살펴본 후 핵무장시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이 우리의 안보체계에 미칠 영향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장에서 김일성의 전쟁관과 군사사상에서 이어온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을 재검토한 뒤, 3장에서 핵무장 이전 단계에서의 북한 군사정책·군사전략의 특징을 김정일 시대에 조명해 그 특징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핵무장 이후 단계에서 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을 예상해 보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5장에서 핵무기를 주요 수단으로 한 북한의 군사전략 구사가 우리의 군사전략적 환경 및 안보체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북핵 대응전략 수립과 연관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 II. 북한 군사전략의 기본개념과 특징

서구 군대와 달리, 사회주의 국가는 ‘교리’(敎理)를 “국가의 방위능력 강화와 군사발전을 위한 기본과업을 규정하는 과학적이며 조율된 사상 및 원칙체계”로 정의하고, 군사정책 야전예규 및 교범으로 구체화되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군사전략’을 “전쟁의 객관적인 법칙과 특성에 관한 지식체계인 군사과학의 연구 성과를 군사교리가 국가명령의 형태로 한정하고 연결시키는 군사적 실천”으로 보고 있다.<sup>1)</sup> 그러므로 북한군의 군사교리를 연구함으로써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을 포괄할 수 있으며,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의 인위적인 구분은 오히려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안보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에 대한 공격작전을 수행할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것이 ‘군사교리’인 것이다. 북한의 군사교리는 한반도 미래에 대한 김일성의 비전에 의해 형성된 3개의 기본적이고 상호 연계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권 차원의 생존, △조국통일을 위한 군사력 운용, △공급적인 재통일이다. 북한의 군사전술은 김일성 사상을 통해 재해석된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유래되었는데, 김일성은 고전적인 전쟁의 정의로부터 소부대급 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사사항에 대해 교시 및 지도라는 형식으로 독점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북한군 군사사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련군의 전략과 중공군의 전술로부터 영향을 받은 혼합물이었다.

1950년 12월 제2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는 김일성이 발표한 <현 조건 하에서의 당면과제> 보고에서, 최초로 군사교리 및 군사사상에 북한군의 전투경험을 반영시켰다. 1951년부터 1962년까지 북한군의 정통이론은 소련군 교리에 기초한 재래식 전쟁 교리와 한국 전쟁 경험을 기초로 수정한 작전술이었다. 스탈린이 제시한 전쟁의 경과와 결과를 결정하는 5대 ‘불변요소’는 북한군의 군사교리에 직접적으

1) 북한 군사전략에 관한 기본개념은 국참대 교재-24 「북한 군사전략」(1993)을 참조.

로 통합되었는데, 그것은 △후방의 안정, △군의 사기, △사단의 질과 양, △군의 무장, △지휘요원의 조직능력이다. 기갑, 보병, 및 포병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지는 제병협동작전도 소련군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한 것이다.

북한군의 군사교리는 1962년 12월에 정규전 교리에서 극적으로 전환하여 인민전쟁을 가미한 교리로 바뀌었다.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이 군사노선은 소련군 형태의 전략에서 모택동의 장기소모전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재래식 전쟁 전략은 이념교육의 강화를 통한 이념전쟁 및 전 인민의 동원이라는 전반적인 개념으로 통합되고 복속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60년대 후반의 대남 은밀침투, 암살·전북활동 기도 등으로 나타났는데, 군사교리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북한군의 구조와 배치가 공격 위주로 되어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북한군의 교리는 공세작전을 통해 결정적인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공격작전은 △적부대의 격멸, △영토의 탈취 및 통제, △적의 전투의지 파괴라는 3가지 목적을 갖는다. 전략과 전술은 제병협동 공격작전, 전장기동, 융통성 및 배합전이라는 핵심개념을 기초로 수립되었다. 집중, 기동 및 화력은 결정적인 지점에서 속도 및 경계와 통합될 때 결정적인 공세적 타격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3개의 핵심요인이다.

전력발전의 변화는 교리와 전략의 변경을 의미한다. 북한군이 직면하는 공격작전의 애로사항은 중첩된 방어선, 광범위한 장애물체계, 견고한 방어진지 및 단호한 방자들로 구성된 험난한 지형의 봉착이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공격작전의 1차적 해결책을 특수작전부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70년대 중반 이후에는 화력으로 강조점이 이전되었다. 80년대 이후 북한군은 상비군과 예비대의 포병이 꾸준히 증강되었고, 자주포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북한군 화포는 동급의 한미 동맹군의 화포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갖는다. 궤도포병진지와 탄약과 각

중 유류 및 군수물자의 지하시설의 전방 추진은 공중우세권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초전의 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북한군 포병이 갱도진지 내 사격의 제한으로 인해 문제점의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김일성의 전쟁관과 군사사상에 기초하여 발전해 왔으며, 총력전, 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 기습에 의한 선제공격, 및 속전속결 위주의 속도전 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의 속도전 교리, 김일성의 유격전 경험, 한국전쟁 실패의 교훈, 한반도의 지형적 요소 등이 고려된 것이다.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을 개념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첫째, 총력전이다. 이는 평화공세와 기만전술로 구성된 정치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군사와 경제의 결합과 군사와 외교의 결합을 의미한다.

둘째,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이다. 이 전략은 구소련군의 전략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전격전의 변형이다. 정규부대는 돌파작전의 주공으로 투입하고, 비정규부대는 적 주진지 후방에 침투하여 제2전선을 형성하며, 전선과 후방 지역에서 연속적인 타격을 가하여 적의 주력을 분산시켜 격파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대규모 경비병 부대와 특수군단을 육성해 왔다. 배합작전에 의거한 전격전으로 초전에 승기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셋째, 기습에 의한 선제공격이다. 이는 정규부대의 기습적 전선돌파와 적 후방 침투를 통해 제2전선을 형성한 비정규부대의 협공으로 적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다. 전선 후방에 침투한 비정규부대는 적의 지휘소, 포병진지, 병참기지, 비행장을 장악하거나 교란시켜 적의 지휘체계

---

2) 참고자료는 국방부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1990); 서원식, 「북한 전략사상 신론」(서울: 한원, 1990); 문광건, 「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한국국방연구원, 2006) 등.

를 마비시키고 연합작전의 기회를 박탈, 적을 포위한 것처럼 기만하여 조직적인 저항을 약화시켜 초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비정규부대의 기습작전으로 정규부대의 기동을 원활하게 하는 공격로를 개척하여 대규모 기갑부대의 작전을 가능하게 한다. 상황 진전에 따라 공군력을 동원하여 적의 심장부를 맹폭하고, 고정익기, 글라이더, 기구, 수송기 등에 태워 적 중심 깊게 침투한 특수작전부대로 하여금 적의 지원을 차단한다. 공격하는 주력부대와 함께 적의 핵심 방어부대를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다.

넷째, 속전속결을 위한 속도전 전략이다. 북한의 속도전 전략은 단기결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개전 초기의 승세 장악을 통한 전쟁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속도전은 제한된 전쟁 비축물자에 따른 물량 대결시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고, 한국군의 전력 재정비 후 반격작전 수행을 거부하며, 미 증원군의 참전 기회를 봉쇄하는데 중점을 둔다.

### **Ⅲ. 핵무장 이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 **1. 핵무장 이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북한에서 군사정책은 최고 우선순위의 국가정책이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전 사회를 병영화하고 북한 전 지역을 요새화함으로써 대내외적 도전으로부터 체제를 보위하고 남침여건 조성에 성공하면 무력으로 통일을 실현한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군사정책은 1962년 이래 4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1998년에 개정된 헌법에 전 인민적, 전 국가적 방위태세를 기본으로 한 4대 군사노선을 명문화하여 국가적 수행과제로 군사정책의 불변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적 목표는 ‘공산화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 데 두고 있으며,<sup>3)</sup> 통일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임무를 군에 부여하고 있다. 이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며, 공자는 방자보다 3배 이상의 우세한 세력을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대륙세력의 군사철학인 크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신봉하고 있음을 뜻한다. 특히 북한의 군사정책은 공산주의의 이념성과 남북분단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여 군의 혁명성을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혁명과업을 달성하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산주의 특유의 군정·군령 2원화체제에 의한 통합군 체제를 바탕으로, 김정일은 자신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국가원수이면서 필요시 인민군 총사령관의 신분으로 북한 전국의 모든 군대와 준군사부대와 예비군까지 직접 총괄·지휘·통제하는 군사제일주의 국가체제를 정착시켜 놓았다.

북한의 군사정책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라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북한 내 자체혁명역량의 구축’, ‘남한 내 동조혁명역량의 확대’, ‘국제적 지원혁명역량의 획득’이라는 3대 혁명역량 강화론을 북한 군사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이 가운데 ‘자체혁명역량 강화’는 군사정책에 있어서 군사적 역량 강화를 통한 국방자위정책이며 4대 군사노선이 핵심이다. ‘동조혁명역량 강화’는 남침시기 조성 정책으로서, 김정일은 6.15공동선언 이후 한국내의 좌경, 용공, 반미, 반군 세력의 양산 현상에 고무되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sup>4)</sup> ‘지원혁명역량 강화’는 군사외교정책의 목표인

- 
- 3) 북한 군사정책은 한반도 공산화를 근간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존재해 왔다.
  - 4) 북한은 남한 내 동조혁명역량의 확대’를 ‘민족기획전략’이라 부르면서, 6.15선언 이후의 남한 상황을 ‘혁명의 만조기에 가까운 상황’으로 인식해 왔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현 남북관계와 북한의 전략」(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2004.8), 6-7쪽.

데, 그 기조는 김정일에 의한 대미 핵외교 승리 위업을 찬양하면서, NPT체제의 불평등성을 제3세계에 확산시키고, 스스로의 불법적인 핵무장을 핵주권론으로 정당화하고, 민족공조에 의한 외세배격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 2. 핵무장 이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군사정책의 이행수단인 군사전략은 군사력에 의하여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는 김일성의 전쟁관과 군사정책을 대원칙으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군사적 의지를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김일성의 전쟁관은 ‘민족해방론’과 ‘전쟁 불가피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조선과의 전쟁은 불가피하며, 남조선 전 지역을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욕구는 북한 정권의 생태적 속성임과 동시에 그들의 존재 그 자체인 것이다.

북한은 군사전략을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일정한 전역에서의 무력의 배치, 전투의 조직·진행 등에 대한 전쟁 전반을 영도하는 작전방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전략은 ‘남조선 해방’이라는 적화통일전략의 하위개념으로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의 추진을 위한 전 단계에서 결정적 시기를 조성한 다음, 후 단계에서는 무력으로 남조선을 해방시킨다는 확고부동한 국가의지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은 그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내놓은 ‘고려연방제 통일’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틀림없다. 6.15공동선언에 언급된 낮은 단계의 연방에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적화통일의 보호색을 띤 위장표현일 뿐이다.

북한은 80년대에 남침을 통한 적화통일의 기회를 잡고자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 간의 전면적인 분쟁을 기대해 왔으나 결국 그런 분쟁은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20세기가 끝나면서 소련 위성국가들의 정권이 대거 붕괴되는 시기를 맞이했다. 80년대에는 군사적인 해결책으로 ‘화



력'과 '기동'을 강조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80년대 초기에 대규모 기동부대들이 창설되면서 '기동'이 새롭게 강조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한군의 부대배치는 제2제대와 전략적 부대와 전과확대 부대를 동시에 운용하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북한군 군사전략의 주목표는 적대행위 개시 이후 30일 이내 한반도를 북한정권의 통제 하에 통일하는 것이다. 남침전략에 있어 기본목표는 한국이 전쟁수행능력을 완전히 동원하거나 미 본토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증원군이 도착·전개하기 전에 한미연합군의 방어를 파괴하는 것이다. 북한 지상군의 2/3와 군수지원의 상당량이 이미 평양과 DMZ 사이의 전방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전쟁준비기간에도 군사관련 활동의 가시적인 폭증은 없을 것이다. 보병에 의한 최초 강습 직전에 북한군 포병부대는 준비사격과 연이은 제압사격으로 한국군의 제1선 방어지대를 초토화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군 전방군단의 제1제대 사단 예하 보병과 기갑 부대들은 후속제대 투입을 위한 간격을 만들기 위해 선정된 좁은 전선에 대해 공격할 것이며, 이러한 돌파작전은 적의 방어노력의 분산 및 혼란 야기를 위한 특수작전부대와 양동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기계화군단은 적을 우회 기동하여 포위·고립시키며, 가능한 한 깊숙이 전략적 후방으로 침입할 것이다. 돌파구 관통의 목적은 한국군의 핵심 C4I가 위치하는 방어중심의 결속력을 와해시킴으로써 대규모 역습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지상전이 주체가 될 남침작전에서, 북한 해군은 동서 해안에 특수작전부대를 상륙시키거나 서북도서를 확보하거나 김포반도에 대한 작전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스커드 미사일과 프로그 미사일은 강습작전 과정에서 한국군의 후방지역과 C4I를 교란시키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제한된 능력으로 인해 최초 해상 지원 및 보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착지부대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군과 공군은 일정 수준의 공세작전을 지속하도록 강요받겠지만 대체로

수세적인 역할로 전환될 것이다.

북한군이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전 초기에 전략적 기습을 달성하고 작전을 신속하게 수행해야 될 것이다. 아마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기동력을 갖춘 전과확대부대를 언제 어디로 투입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때일 것이다. 북한군은 외부 지원 없이 수개월간 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충분한 탄약·식량·연료를 견고한 지하시설에 비축한 것으로 믿어진다. 전쟁 승리를 위해 북한은 배합전을 구상하고 있다. 제1전선은 재래식 군사력이 담당하며 DMZ를 연한 방어부대를 돌파하여 방어하는 한미연합군을 격파하면서 한반도 전역으로 신속히 전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작전은 한미연합군 후방에서 습격과 교란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작전부대가 담당하는 제2전선의 형성과 밀접하게 협조된다.

남한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은 3단계로 구성된다. 제1단계의 목표는 DMZ를 연하는 방어선을 분쇄하고 전방전개 부대를 격파하는 것이다. 제2단계의 목표는 서울을 고립시키고 제1단계 작전의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다. 제3단계 목표는 잔여 부대를 추격 및 격파하여 한반도의 잔여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다. DMZ를 연하는 전방방어선에 대한 공격과 동시에, 북한군은 스커드 미사일과 프로그 미사일로 고풍탄·연막탄·화학탄을 사용하여 비행장, 병참선, 지휘통제 및 병참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다. 또한 후방지역에 침투한 특수작전부대의 제2전선에 의해서도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들 특수작전부대원의 일부는 아군의 복장·무기·장비를 사용, 한미연합군의 비행장, C4I 및 핵심 시설 등을 공격하기 위해 공중·해상 경로와 장거리 땅굴을 이용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선제기습에 의한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으로 전후방을 동시전장화하여 초전 단계부터 적을 혼란 상태로 몰아 전쟁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기계화·장갑화 부대와 신형무기체계로 무장된 공격형 군사력에 의한 속전속결을 구사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휴전선에 근접한 수도권에 한국인구의 근 절반인 2천여만 명이 밀집되어 있고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바, 북한이 기습선제공격으로 수도권을 장악하면 국력이 역전됨에 따라 남한 전 인구의 절반이 군사적 인질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sup>5)</sup>

이때 북한은 12만에 달하는 세계최강의 특수전 부대를 후방 깊숙이 지·해·공 기동수단과 땅굴을 통해 침투시켜 수도권 이남에서 제2전선을 구축하는 배합전략을 구사함으로써 한국의 전후방을 동시 전장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은 6·25때와 같이 남한 전체를 점령하려 할 필요가 없으며, 미사일과 화생무기로 일본과 아시아 태평양상의 미군 기지를 강타하거나 주한미군의 증원역량을 해상에서 차단한 다음, 2천만 수도권 인질의 생명 보호를 담보로 휴전협상을 전격 제의하면 남측 전쟁지도부는 대량의 인명살상을 방지하고자 정전(停戰)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sup>6)</sup>

결국 북한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한미군의 후방지원기지가 될 일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집중 공격함으로써 미군 증원을 차단하고 최단기간 내에 한국을 점령하여 적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up>7)</sup> 요컨대, 김정일의 대남 군사전략은 주

5) 고려대 강성학 교수는 “북한이 노리는 전면기습작전의 제1차적 공격목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장악”이라고 주장한다. 강성학,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트로이 목마에서 러시아 롤렛으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심포지엄」(주제: 북한 군사문제의 해부: 역사적 변천과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군, 1997.2.26).

6) 북한군이 한국의 수도권을 점령한 뒤 정전(停戰)을 제의하는 가상시나리오에 대해 국방연구원 차원에서 대비책이 검토된 바 있다. 김명진·남만권, 「정전/종전 협상전략 연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5).

7) 스티븐 브래드너(Stephen Bredner) 전 주한미군사령관 특별고문은 “북한의 전투 계획은 7일 이내에 최우선적으로 한국의 전방방어진지를 유린하고 서울을 고립시키며, 그 다음에는 작전을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해서 한국군을 패배시키고, 미

한미군을 철수시켜 제2의 한국전쟁 개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쟁발발 이후 계획된 미 증원군의 투입을 무력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수도권만 선점한다면 한국인구의 절반을 인질로 만든 상태에서 미국과의 조기 휴전협상으로 전쟁을 유리한 상황 하에서 끝낼 수 있다는 계산까지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3. 북한의 전시사업세칙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김정일 정권의 군사전략 실체는 수년 전 한국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된 북한의 「전시사업세칙」(戰時事業細則)에 잘 나타나 있다.<sup>8)</sup> 이 「전시사업세칙」은 총력전 수행 개념 하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초기 인력확보 및 확보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심리전 대비가 핵심임무로 기술되어 있다.

북한은 2004년 4월 7일자로 전쟁 발발에 대비하여 당·군·민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적시한 「전시사업세칙」을 제정해 전국에 배포했다.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의로 「전시사업세칙」을 내놓은 것은 2002년 10월 북핵위기 이후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 개전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같은 달에 개정된 북한 형법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했다면 「전시사업세칙」에는 무기체계와 전쟁개념 및 정세의 변화를 반영한 셈이다. 실제로 세칙 제1장 총칙은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하고 국제적인 압력공세를 강화하여 우리를 질식,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에게 대한 무력

---

군이 도착할 수 없도록 공항과 항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월간조선」(2001.4).

8) 2005년 1월 5일자 경향신문은 국내 최초로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2쪽 짜리 ‘전시사업세칙’ 전문(前文)을 입수 공개했다.

침공을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사항은 북한은 한국전쟁 직후부터 민간의 경우에는 주로 방어적 개념을 적용하는 한편, 휴전선 인근 군인들은 유사시 남한침투 장소를 설정하는 등 공격적 개념 위주의 세칙을 정해 왔다는 점이다. 일부 누락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 문건은 미국의 압박에 맞설 수 있다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대외 선전용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시사업세칙」은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과 남북 경제교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밀하게 전쟁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문건이다.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력동원체제이다. 전시동원 작업은 군사동원부가 주축이 돼 진행한다. 전시동원령이 내려지면 도·시·군(구역) 군사동원부는 24시간 안에 초모소(招募所, 인력모집 주체)와 도중숙박소 설치를 끝낸다. 전시상태의 정치·군사·경제·외교 등 국가사업은 모두 국방위원회에 집중되며, 국방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일의 결론에 따라 집행한다. 전시상태의 선포와 해제 역시 최고사령관 명의로 하달한다.

둘째, ‘신 해방지역’에서의 병력 보충이다. 전시 병력 보충은 예비역 및 의무역 보충대원들을 기본으로 한다. 남쪽이 해방될 경우, 남쪽에서 현지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은 인원들과 의료시설에서 완치된 퇴원환자들을 2차 병력보충 대상으로 한다. 남쪽에서 군사동원부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최고사령부의 승인 하에 혁명조직의 추천을 받은 인원들을 군종, 군단사령부, 사(여)단 당위원회 비서처 회의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입대시킨 뒤 최고사령부에 추후 보고토록 한다.

셋째, 갱도(지하) 전략이다. 국방위원회 인민무력성과 내각, 인민보안성을 비롯한 중앙급 지도기관과 도·시·군(구역) 지도기관들은 지휘소를 지하갱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전시조건에 맞게 모든 부대들에 갱도생활로 넘어가는 데 대한 지시

를 하달하며, 적의 타격으로부터 인원과 무기, 전투기술 기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넷째, 전시 적공사업이다. 심리전 및 공작을 전담하는 적공국은 방어 작전 시기, 공격작전 시기, 지구전 시기로 구분해서 심리전 및 대민공작을 펼치도록 한다. 방어 시기에는 기존 전방 방송국들과 지방 당·정 방송시설을 갱도(은폐부)에 옮기고 임무를 수행케 한다. 그러나 대민공작은 실시하지 않는다. 공격 시기에는 해방된 지역의 방송, 출판업체를 탈취하여 거점으로 삼고, 선전전을 펴는 한편으로 적 의거자(義學者)들과 연고자, 포섭된 주민들을 적군와해사업에 적극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전 시기에는 선전매체를 통한 심리전을 벌이는 한편, 해방된 지역에서 공작원들이 적군 연고자들과 적국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을 강화한다.

「전시사업세칙」은 전선을 최전선과 2선, 3선으로 구분해 북한이 군사력을 세 갈래로 운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또 조선인민군 각 부대별로 비교적 상세한 행동지침을 내리고 있어 전쟁을 수행하는 북한의 일선군 조직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전선은 전쟁 발발시 사실상 소멸될 것을 전제로 조직됐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전선 2선과 3선은 순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각각 독립된 전력으로 운용된다. 최전선 전력이 사실상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 주 전력은 2선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는 기계화군단과 원산군단 등 정예부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선은 후방총국 산하의 후방전력을 말한다. 2선과 3선에는 특히 적 특수부대에 대한 방어임무가 맡겨져 있다. 내륙지대 방어부대들은 2선과 3선에서 항공기 및 직승기(헬기)와 육전대(공수부대), 특공대를 투하지점에서 결정적으로 소탕해야 하는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각급 부대별로 최고사령부의 지시에 따라 적 후방에 침투시켜 배후를 타격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북측이 광범위한 비정규전

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대별 임무를 보면, 우선 반(反)항공 방어 임무는 비행부대, 고사로켓부대 및 반항공고사포병부대가 수행한다. 각급 부대 및 단위들은 상대방의 비행대와 토마호크를 비롯한 공중 목표물을 제때 소멸해야 한다. 전방 군부대와 구분대는 먼저 도착한 인원들을 넘겨받아 1차적으로 수색 및 반특공대 방어를 조직하고 장비물자를 반출, 대비한다. 중요 대상물 부대 및 구분대들은 대상물 경비방어에 노농적위대를 넘겨받아 방어를 조직한다.<sup>9)</sup>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김정일 시대의 군사전략은 김일성 시대에서 강조돼온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군사전략과 다르다는 점이다. 농병(農兵) 일치제를 채택한 북한군이 엄청난 수량의 기갑력과 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발휘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의 북한군은 수도권을 겨냥한 전방갱도포병과 10만 명 이상의 특수작전부대 위협에 의한 대남 심리전의 중요성에 비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핵문제로 인한 미군의 폭격을 회피하기 위해 이미 완성된 전국토의 요새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미사일·화학무기 위주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위협으로 남한과 주변국의 반전여론을 유도하여 미국의 한반도 군사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차단시키려 할 것이다.

## IV. 핵무장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 1. 핵무장 관련 북한의 안보정책 개요

90년 중반 이후 급격하게 변한 북한의 안보상황에 의해 북한의 군사

9) 특이한 점은 미사일부대에 대해서는 공격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화학부대에는 방어지만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화학국에 대해서는 핵, 화학, 세균무기 배치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정찰과 함께 핵폭발구역과 오염구역에 대한 제해소독 등 9개 항목의 지시를 내리고 있다. 핵과 화학정황은 제때 최고사령부까지 보고토록 규정, 북측도 생화학전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략도 질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였다. 즉, 조건과 능력에 기반에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한 것이다. 김일성은, 1986년 10월 방북한 동독수상 「호네크」에게 실토한 바와 같이,<sup>10)</sup> 주한미군의 존재와 미 핵무기의 배치로 인해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무력남침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미국의 전쟁개입 또는 대북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통일을 달성할 수단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핵개발에 착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일성 사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실권을 장악했지만, 행정수반인 주석과 정무원장의 자리는 고사하였다. 이는 과거 선전선동 부문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인해, 최고 권력자가 보장해 주기 어려운 인민생활의 개선보다는 무력으로 일거에 남한을 탈취하는 극적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내부체제는 결코 외부 수혈로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이 가능한 인프라가 없고 또 개혁개방 의지도 없다. 따라서 북한의 자발적인 대남적화정책 포기는 내재적인 체제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일이 내세운 선군정치와 강성대국은 결국 적보다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과 핵능력 등 비대칭전력을 앞세워 국제사회의 간섭을 배제한 후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야망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전 조선민족 지배’라는 목표 하에 공세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단·중기적으로는 미국 압박이 제거될 때까지 수세적인 안보정책을 견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탈북자들은 “북한지도부가 경제를 포함한 제반 상황이 암담하게 악화되고 있지만, 대남사업과 핵개발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증언한다. 북한지도부가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가장 중요시

---

10) “북한은 남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다. 미국의 핵탄두 천 발 이상이 남한에 저장되어 있고, 이 중 2발만 가지고도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 Robert S. Litwak and Kathryn Weathersby, *The Kims' Obsession: Archives Show Their Quest To Preserve the Regime*, *The Washingtonpost*, June 12, 2005, Page B01.



할 요소는 ① 북한의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한미연합군과 북한군의 재래식 군사력 차이의 심화, ② 북한 사회주의 이념동맹체제의 붕괴로 인한 고립 및 이념의 변질, ③ 재래식 능력에서 비재래식 대량살상 능력으로의 대체, ④ 상대방 동맹체제의 균열, 특히 남한 내 반미·반일 감정의 만연, ⑤ 대남 정치·외교·심리적 우위 확보 및 잠재적 동조세력의 견고한 성장, ⑥ 북한 내부 불안에 의한 우발적 정권전복 가능성, ⑦ 북핵문제 악화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성, ⑧ 불법행위 및 인권문제 대두로 인한 국제적 고립심화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김정일의 리더십 아래 ‘한반도 통일’이라는 최대 과업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이런 현상은 김정일 나름의 정세 판단에 의한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내외 정세변화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하다. 미국과의 핵협상을 거치면서 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 핵무기가 정권안보의 담보물이면서도 남한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인 갈취도 가능한 위협수단이 된다는 것을 자각한 것이다. 남한 정치상황의 유동성,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운 미국의 곤경, 북한의 6자회담 주도 가능성 등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김정일은 핵무기가 미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가운데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달성에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을 지녔음을 내다 본 듯하다. 이러한 전략적 계산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 부담과 북핵상황 악화로 인한 미국의 대북압박 가능성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걸쳐 몇 가지의 사태변화가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그것은 ① 이라크 사태의 장기화와 이란 핵상황의 악화로 인한 미군전력의 중동지역 구축, ② 부시 대통령의 퇴임 및 유화적인 차기 행정부 등장, ③ 북한의 전략적·작전적 용도에 충분한 핵무기의 보유,<sup>11)</sup> ④ 장거리 탄도미

사일 개발 이후 미-북 양자협상 가능성 등이다. 북한이 우려하는 1차적인 위협은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다. 그러나 그것은 목전의 위협은 아니라고 본다. '선제공격'이라는 부시 독트린에 의한 이라크 침공은 비확산 주도국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크게 손상을 주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sup>12)</sup> 북한은 6.15선언과 10.4선언 이후 나타나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과 남한 내부정세 변동이 그들로 하여금 비정규전·비대칭전략·정치심리전을 혼합한 대남 혁명전략의 본격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 2. 핵무장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북한이 핵무장 이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남전략은 핵무장 이전의 대남전략과 비교하여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핵무장 이후 북한은 대남전략의 궁극목표를 '무력 사용에 의한 통일 달성'으로 설정하고, 중간목표는 '대남혁명역량 강화와 한미동맹관계 단절'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이후 북한은 (1) 한반도문제를 민족내부의 문제로 규정하고 외세의 개입을 배제시킨 후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는 대남전략을 적극 수행하며, (2)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로 북한체제 인정, 미국의 핵우산정책 철폐 및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고, (3) 공세적 협상태

11) 미국 북한정보 소식통은 북한은 플루토늄 핵무기를 6개에서 12개, 심지어 그 이상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스프레트릭 연구원은 2006년 6월 13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IISS는 북한이 5개 내지 11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Dailynk.com(2006.6.14).

12) 이러한 관점에는 과거 금창리 사찰과 길주 폭발사건에 대한 미국의 오판도 일조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의 오류는 이란의 핵문제 해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로 행동의 자유 확대 및 협상력 우위를 유지하며, (4) 노골적인 군사 위협, 대남침투 및 테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고, (5)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약화·단절로 대남 군사도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기회를 조성하는 것을 ‘대남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3)</sup>

북한은 위 대남전략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군사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첫째, 노골적인 위협이나 테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갈등과 혼란 조성으로 취약점을 확대하고, 국제 교역 및 투자에 악영향을 미쳐 점진적인 국력의 약화를 기도할 것이다. 둘째, 국지도발로 한국의 방어 능력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을 시험해 볼 것이다. 즉, “전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대남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보복을 견제하고, 한국내의 친북세력과 동조하여 한국의 체제균형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셋째,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대남 기습공격을 개시할 것이다.<sup>14)</sup>

핵무장 이후 북한은 남침도발에 유리한 결정적인 시기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첫째 상황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체제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때 국면전환을 위해 대남 군사도발을 감행하는 것이고,<sup>15)</sup> 둘째 상황은 북-미 평화협정체결

13) 연세대 이정민 교수는 “한국이 북한 핵무장을 묵인하고 미국방식의 북핵문제 해결을 거부할 경우 한미동맹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미국은 주한 미군의 단순한 감군이 아닌 완전철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과소평가하고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려 들 경우 미국은 지체 없이 철수할 개연성이 있는 바, 북한은 이점을 노릴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정민, “북한 핵, 한반도 전쟁촉발 가능성” 『주간조선』 (2003.1.9).

14) 이춘근, “북, 핵무장 후 단계적 대남군사작전 전개할 것,” 『미래한국』 (2006. 10.28).

15) 북핵문제의 외교적 타협 실패시 상황시나리오는 워싱턴과 국내에서 일부 제시된 바 있다.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후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타격하는 상황, 한미공조로 북한을 타격하는 상황 등이다. “외교타협 실패시 2가지 가상 시나리

을 통한 주한미군 철수 및 핵우산 제거가 실현됨으로써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되고 한국 안보체계가 불안해 지는 등 한국의 방어전선에 취약성이 커졌다고 판단할 때 무력남침을 선택하는 것이다. 군사적 도발에서 북한은 ‘핵무기 사용’ 위협으로 미국의 증원역량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예컨대, 한국의 주요 항구·비행장에 대한 핵공격 위협으로 미 증원군의 투입을 억제하고,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후방지원기지 사용을 견제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항공모함의 투입을 견제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대남 선제공격을 감행 이후 전략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핵 위협을 배경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전협정을 미국과 체결하려고 할 것이다. 즉, 북한은 기습공격이 일정 수준(서해5도, 수도권 등 전략거점 확보 등)에서 성공했다고 판단할 경우 핵보복을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추가 개입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만일 전쟁상황이 교착될 경우에는 고습도치식 전략으로 전취물을 확보하며, 전쟁 실패시에는 핵사용에 의한 공멸 가능성을 위협수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체제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것이다. 기습공격에서 북한은 초전에 야전용 전술핵을 주요 전략거점에 사용하여 공격속도를 증가시키고, 주한미군에 대한 대량살상을 강요함으로써 미국 내 반전여론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 3. 북한의 대남 핵사용 시나리오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는 목적은 ‘적의 공격을 억제시키기 위한 목적’과 ‘공격용으로 사용하여 전승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두 가지가 있다. 전쟁억지를 위해 핵을 보유한다면 소량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

오,” 『주간조선』 (2003.1.16).

많은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공격용으로 핵을 보유할 경우에는 다량의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다량은 아니지만 소량도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군사전략상 그들이 보유한 전략무기는 전시에 사용할 목적을 지닌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목적은 양면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잠재적국에게 핵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를 심어줌으로써 상대방의 선제 공격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동시에, 전쟁이 발발하였을 경우에는 군사전략 목적상 패퇴 방지 또는 전승 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이중 목적을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지만,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 보복을 선택할 확률은 매우 높다. 그 외에도 북한은 전쟁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켜 일순간에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제 핵사용을 결심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유사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는 다양한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시 속전속결로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할 경우이다. 과거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강요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북한은 개전초기 서울 등 한국의 대도시를 표적으로 핵폭탄을 사용, 막대한 인명피해를 강요함으로써 남측의 전쟁수행의지를 꺾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한국내의 주요 전략목표에 대해 핵폭탄에 의한 대규모 폭발을 시도함으로써 한미 동맹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심대한 수준으로 약화시켜 전승을 보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및 전쟁지도부에 대한 정밀공격을 감행할 경우이다. 개전 초기에 미국이 예방차원에서 북한의 핵관련 시설과 평양 인근에 위치한 전쟁지도부에 대해 정밀타격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응해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 및 미군기지 또는 일본의 미군기

지에 대해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한미 동맹군이 반격작전의 일환으로 휴전선을 돌파한 뒤 평양으로 진격하려고 할 때 북한이 이를 차단하고자 할 경우이다. 개전 초기단계에서 한미 동맹군이 북한의 공격을 수도권 이북에서 저지한 뒤 반격작전을 개시하여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게 될 경우, 북한은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거나 실제 핵무기를 사용하여 반격을 가함으로써 한미 동맹군의 휴전선 돌파를 저지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북한이 전세가 크게 불리하여 체제수호 자체가 위협받을 경우이다. 북한정권의 지상목표는 체제 및 정권의 수호이다. 평양이 피탈되는 등 전세가 크게 불리하여 패전의 가능성이 짙어짐에 따라 체제수호가 위협받을 경우 북한지도부는 핵사용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북한군이 북-중 국경선 부근까지 밀릴 경우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 사용을 포기한 채 자멸하는 것보다 최후 수단으로 서울 또는 동경을 표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 V. 한국 안보체계에 대한 시사점

핵무장 이후 단계에서 재수립될 북한의 대외정책·군사전략은 핵무장이전과 비교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우선 핵폭탄을 보유했을 경우 북한은 ① 부분 폐기를 위한 대미 협상용, ②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용, ③ 미국의 선제공격 차단을 위한 억지용, ④ 달러 획득을 위한 해외 판매용 등 다용도의 핵무기 활용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핵전략의 구사는 북한이 숨겨놓은 핵무기는 첨단감시기술이나 현장사찰 방법으로 찾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전략적 안보환

경 및 우리의 안보체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무장은 유사시 한국에 대한 핵사용 가능성을 대폭 증대시킬 것이다. 불량국가가 가진 한두 개의 핵폭탄도 치명적일 수 있다. 핵폭탄을 선박에 싣고 부산항에 들어오거나 비행기에 싣고 서울로 날아오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1998년 군사첩보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 차수가 지휘하는 자살폭격결사대는 Mig-15/17 등 노후 전투기 140여대를 남한의 주요 목표물에 자살폭격을 감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sup>16)</sup> 이 결사대가 유사시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싣고 한국의 전략표적에 자살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남북 양자간의 군사적 균형은 급격히 붕괴될 것이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 우세에 핵무기가 추가됨으로써 북한이 확실한 군사력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는 북한 핵에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것이다. 그 경우, 서해교전과 같은 북한의 무력시위가 빈번해 질 수 있고, 우리는 확전을 우려해 군사작전의 행동반경에서 심대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

셋째, 북한은 노골적인 위협이나 테러를 통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북한이 핵무장으로 군사문제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 서해교전과 같은 저강도 분쟁을 초래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한 이후 인도에 대한 기습공격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한 사례를 본받아 북한도 핵무기 보유 이후 과감한 군사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은 핵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위협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의지를 봉쇄하고 한국의 전쟁반대세력과 동조하여 한국의 안보체제를 약화

---

16) 세계일보(1998.9.21).

시키려 들 것이다.

넷째, 북한은 핵능력 보유 등 대남 군사력 우세라는 고압적 자세에서 통일문제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경우 한반도 통일이 북한쪽에 유리해 질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과거 예멘의 궁극적 통일은 내전 당시 군사력이 우세했던 북예멘이 남예멘을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실현되었다. 핵무장 등으로 군사력 우세를 믿는 북한이 예멘식 통일을 답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섯째, 한국의 외교·경제·군사적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정책 노력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치중됨으로써 대미, 대주변국, 대유엔 상대의 정치·외교적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위험 증대로 국내 경제활동의 위축,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여건 악화 등 경제발전 저해현상이 초래될 수 있고,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군비증강 유발로 군사비 소요가 대폭 증대될 수 있다. 한반도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국의 국제신용평가 등급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존의 외국투자가 빠질 우려가 있으며, 생산이나 소비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북한 핵무장 이후의 남북대화는 '북 핵무장 해제'에 관한 대화가 아닌 한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무장이 확인될 경우, 1992년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여타 남북경협 관련 합의도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중요한 협상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대하게 되어 남북대화는 북한 주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압박에 남북이 민족공조로 함께 대항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위협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북한은 통일전선전략 추진의 일환으로 남북협상을 지속시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한국의 적대정책의 포기를 대화진전의 전제조건임을 고집할 경우에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 VI. 결론

북한 핵무장이 국내외적으로 끼칠 악영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지만 남과 북의 군사전략에 미칠 영향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무장 상황은 한반도를 '재래식 무기의 대치상황'을 '핵무기-재래무기 대치상황'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북한군은 한국군에 비해 재래식 전력에서 양적 우위를 점해왔는데, 여기에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까지 포함될 경우 남북한간의 군사력 불균형은 극도로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북한의 핵무장은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환경을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 비록 한국이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의 공세적 전력구조를 강화하여 전쟁수행 잠재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사시 북한에게 미 군사력의 증원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이점을 과신한다면 대남 군사전략은 핵무장 이전 상태보다 훨씬 더 공세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결국 한반도에서 재래전쟁 또는 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 구사는 북한이 확전을 각오한 대담한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핵무장 이후 북한이 한반도의 특정 지역에서 군사전략적 이점을 확장할 목적으로 소규모의 군사작전을 전개할 유혹을 갖게 될 것이며, 그 경우 한국은 적극적인 대응작전을 수행하게 어렵게 될 것이다. 예컨대, 핵무장 상태에서 북한 해군이 서해해상경계선(NLL)을 넘어선 해상도

발을 감행하고 서해5도 중 1-2개 도서를 점령하는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탈취된 도서를 재탈환하기 위해서는 확전을 각오해야 하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은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군사전략적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컨대, 우리는 북한이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핵무기 사용을 전제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인지를 주시해야 하는 한편,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전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는 한미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 보강과 방호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전쟁은 재래식 전력에만 의존한 방자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공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전략인지를 증명하고 있다.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장 상황에 대비해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성 있게 제공받는 한편, 한국형 미사일방어시스템 구축, 대량보복능력 확보, 정보전 능력 강화 등 독자적인 북핵 대응전략을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강성학. 1977.2.26.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트로이 목마에서 러시아 롤릿으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 논문집.

- 국방부. 1990.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
- 국방참모대학. 1993. 「북한 군사전략」, 국참대 교재-24.
- 김명진·남만권. 1995. 「정전/종전 협상전략 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김태우. 2003.10. 「북한 핵문제 종합적 대처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 남만권. 2005.3.21. “김정일 정권의 핵전략과 아국의 대책.” 「주간국방논단」.
- \_\_\_\_\_. 2004.3.29. “북한 핵무기 보유시 파장과 위협성.” 「주간국방논단」.
- \_\_\_\_\_. 2003.7. “북한 핵무장의 안보적 파급영향 분석.” 「전략연구」.
- 문광건. 2006.6. “북한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 「북한 군사체제: 평가와 전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이정민. 2003.9. “북한 핵, 한반도 전쟁촉발 가능성.” 「주간조선」.
- 이춘근. 2006.10.28. “북, 핵무장 후 단계적 대남군사작전 전개할 것.” 「미래한국신문」.
- 서원식. 1990. 「북한 전략사상 신문」, 서울: 한원.
- 주간조선 편집부. 2003.1.16. “외교타협 실패시 2가지 가상 시나리오.” 「주간조선」.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4.8. 「현 남북관계와 북한의 전략」, 정책토론회 결과보고서.
- Bredner, Stephen. 2001.4 “북한의 전략.” 「월간조선」.
- Litwak, Robert S. and Kathryn Weathersby. June 12, 2005. The Kims' Obsession: Archives Show Their Quest To Preserve the Regime. *The Washingtonpost*.



# Comparison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before and after Nuclear Arming

Nam, Man-Kwon\*

After successful nuclear tests Pakistan launched a more severe surprise attack toward India than before. It is highly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adopt this Pakistan military strategy if it i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e North Korean forces armed with nuclear bombs could make double its war capability through strengthening aggressive force structure and come into effect on blocking reinforcement of the US forces at the initial phase of war time. Therefore we may regard that Pyongyang's nuclear arming is a major one of various factors which increase possibility of waging a conventional warfare or a nuclear war.

North Korea's high self-confidence after nuclear arming will heighten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via aggressive military threat or terror toward South Korea, and endeavor to accomplish its political purpose via low-intensity conflicts. For instance, nuclear arming of the Pyongyang regime enforces the North Korean forces to invade the Northern Limit Line(NLL), provoke naval battles at the West Sea, and occupy one or two among the Five Islands at the West Sea. In that case, the South Korean forces will be faced with a serious dilemma. In order to recapture the islands, Seoul

---

\*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hould be ready for escalating a war. However it is hard to imagine that South Korea fights with North Korea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yongyang regime after nuclear arming strongly tends to occupy superiority of military strategy and wage military provoc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nuclear arming, military strategy, security policy, northern limit line, surprise attack, conventional war, nuclear war